

올해의 불서 대상에 <만해, 그날들> 선정

45개 출판사 92종 접수
오는 12월 10일 시상식



올해 발간된 불서 중 가장 우수한 도서에 <만해, 그날들> (박재현 지음, 푸른역사)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3일 '올해의 불서 10'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만해스님의 삶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사와 근대불교사를 재조명한 <만해, 그날들>이, 우수상에는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지승도, 운주사)와 <불자로 산다는 것>(도일님, 불광출판사)가 각각 뽑혔다.

대상을 차지한 <만해, 그날들>은 만해의 저작물 및 만해 관련 연구성과물, 그리고 한국 근대사 분야의 학술적 성과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들도 압축적으로 녹여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불서'에는 45개 출판사에서 92종의 도서가 접수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계종, 한상균 피신 '평화적 중재' 나선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상균 민주노동당 사태 관련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당초 화쟁위는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11월 23일 도법 스님과 한 위원장 만남이 성사된 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표명했다.

"평화적 중재는 불교계 역할"

첫 단추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꿰어졌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동참자일동(이하 100인대중공사)은 11월 25일 열린 대중공사에서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 중재안'을 특별안건으로 다루고,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100인대중공사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12월 5일 2차민중결기대회가 평화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100인대중공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 주체다. 그런데 불법집압과 폭력시위란 악순환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 및 갈등의 화근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집회 주체 측과 경찰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적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100인대중공사는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

다"며 "아픈 국민들이 자신 삶의 터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국자들이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소문 발표에 앞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에선 한 위원장 사태 관련 '중재 방식'을 두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 펼쳐졌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불교계가 주도해 평화적 시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위 당일 2~300명 스

화쟁위, 3가지 요청안 전격 수락 대중공사서 '중재 방식' 논의돼 2차 결기대회 평화적 성사 호소

남들이 민경 사이에서 평화지대를 만들고, 평화시위를 유도했으면 한다. 그러면 폭력시위와 강경집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또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2차 결기대회에 참여하는 것보단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3일 화쟁위 측에 △ 12월 5일 2차 민중총결기대회의 평화적 성사 △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성사 △ 정



한상균 조계사 피신 일시

- 11월 11일 불법집회 주도 혐의 구속영장 발부
-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 조계사 경내 진입
- 11월 18일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 면담, 화쟁위 측에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
- 11월 19일 1차 화쟁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 '사실상' 수용
- 11월 23일 도법 스님과 한 위원장 면담, 한 위원장, 요청안 3가지 전달, 은신 8일 만에 공식석상 모습 드러내
- 11월 24일 2차 화쟁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한 위원장 요청안 전격 수용
- 11월 25일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 긴급안건 발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면담 요청
- 11월 26일 100인대중공사 '대국민 호소문' 발표

부의 노동계약 정책 추진 중지 등과 관련해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화쟁위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위원장의 요청안 3가지를 전부 수용키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 강경책에 '공권력 투입' 우려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관련해 정계 안팎에서 "경찰을 투입해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조계사 일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은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며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배후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1월 20일 YTN라디오에서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단초가 됐다. 이 같은 김 의원 주장에 조계사는 11월 23일 국회에 항의 방문했으나, 김 의원의 사과를 거부해 불교계 공분은 심화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 단체들은 줄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권력 투입을 미연에 방지

하고 나섰다.

이에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은 11월 25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공권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 문제 본질을 치유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구분사주지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주장은 불교가치에 대한 폭력일 따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공권력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회 안팎의 분위기에 경찰은 난감한 기색이다. 과거 1995년 한국통신 노조 지도부 및 1998년 현대중공업노조원 검거 당시엔 조계사에 경력을 투입해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다. 화쟁위가 25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공식 면담을 제의했으나 26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쟁위 관계자는 "27일 경찰 측 입장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로경찰서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고종 새 종회의원 "종단 정상화" 결의

11월 24일, 14대 당선자 연찬회

태고종은 11월24일 AW컨벤션센터서 '14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는 원로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14대 중앙종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이 자리가 태고종단의 아픔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당선된 종회의원들이 애중심을 가지고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종무원장협의회장 도광 스님은 "7월 이후 전국 교구 종무원장들로 구성된 종무원회의가 총무원장을 대신해 종무 행정을 펼쳐 왔으나 새로 종회가 개원되면 우리는 다시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4대 중앙종회는 12월 15일 사간동 서울 법륜사서 개원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영논리 안돼"

사회적대회모임 등, 11월 26일 공개토론회 개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진·보수 입장은 극명히 나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진실과화해를위한사회적대회모임·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역사교과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2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도법 스님과 이수호 전대일재단 이사장, 서경석 새로운한국을 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사리사욕과 진영논리, 정치적 이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도법 스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질이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은 오간데 없다"면서 "온 사회가 끝없는 외증 어느 한 개인과 집단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은 11월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익 우익 모두 우리의 역사 공과 명백히 드러내 기술해야

의 승리와 이익만 추구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 사회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과 진실을 드러낼 것"을 제시했다. 스님은 "상식이라면 누구

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을 찾아야 한다"면서 "좌익도 우익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엄연한 우리 역사다. 모두에게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므로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고, 균형 있게 기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측 대표 이수호 이사장은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드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편향된 진영을 결집, 단결시키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냉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어떤 문제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유용한 해결법"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서경석 목사는 "국정화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제일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것은 백해무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목사는 "학계의 역사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좌와 우가 꾸준한 역사 논쟁을 통해 하나씩 함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日 위안부' 해결 위한 25년 감사합니다"

정대협, 11월 20일 '제21회 불교인권상' 수상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이하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25주년 기념대회 및 제2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제21회 불교인권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불교인권상 수상에서 정대협은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점, 정신대 피해자들의 심터운영 및 생존자 지

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인식논란은 일본군의 전시 성노예문제까지 외면하거나 미화시킬 우려마저 있다"며 "이 같은 현실 속 올바른 역사와 인류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대협의 노력과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21회 불교인권상에 선정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화엄의 세계

해마다 동짓달이 되면
통도사는 어김없이 구법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엄산림 기간

입재 | 2015. 12. 11(금) ~ | 회향 | 2016. 1. 9(토) 30일간 | 장소 | 통도사 설법전

동참금

영가 동참비 : 1위당 2만원
온산림 동참금 :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 10만원

문의

종무소 TEL 055)382-7182
기도접수처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www.tongdosa.or.kr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08:00~09:00)
울산지역 울산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태화R(07:40) → 구방송국(07:55) → 공업탑R(08:10) → 법원앞(08:15) → 무거R(08:2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명축림 통도사